



|      |  |
|------|--|
| 수신   |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  |
| 발신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
| 연락처  |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
| 배포일시 | 2024년 10월 19일 00시                                  |
| 제목   | <b>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는 임금협약 즉각 체결하고<br/>합의안 신속히 이행하라!</b> |

##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는 임금협약 즉각 체결하고 합의안 신속히 이행하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 소속 충북테크노파크 지부는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와 지난 7월 24일(수) 2024년도 임금협약, 단체협약 상견례를 진행하고,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9월 20일(금) 2024년 임금인상(안)을 잠정 합의하였다.

그리고 9월 30일(월) 오후에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으나, 9월 26일(수)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협약 체결 거부로, 체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 노조는 즉각 세 차례나 공문발송 하여 지속적으로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 10월 11일(금)에 회신을 보내 “재단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모하는 중”이라고 답할 뿐이었다. 정확한 체결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이, 우리 노동조합에게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10월 급여에 잠정합의 한 2024년도 임금인상을 4.45%와 직급보조비 신설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 합의한 내용이다. 사용자는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2024년 임금 협약을 신속하게 체결하고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일방 파기로 인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사측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사용자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과기연구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은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충북테크노파크 구성원 모두가 적용받는 처우 내용이다. 충북테크노파크 사측은 이 점 깊이 명심하고 신속히 임금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0월 19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